

대선 종반전 후보간 고소·고발 난무

‘검증공방’ 과열 양상 수십건 검찰 접수

수사 결과따라 선거 후까지 갈등 소지

19대 대통령 선거(5월 9일)를 앞두고 각 대선 후보 및 소속 정당 사이의 ‘검증 공방’이 과열 양상을 띠며 고소·고발이 잇따라 접수돼 검찰이 다시 바빠졌다.

각 후보 측은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의 진위를 가려보자는 입장이지만 주요 선거 때마다 정치적 쟁점을 정치적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검찰에 따기기는 게 합당하느냐는 지적도 여전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펴낸 자서전에서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결정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 측은 지난날 24일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송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문 후보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거짓 발언을 했으며 문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문 후보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도 검찰로 넘어왔다.

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제기해 온 하태경 의원을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준용씨 채용 당시 인사담당자였던 최모 팀장을 공용서류 파기 및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최 팀장이 준용씨 채용의 사실관계를 은폐하고자 내부 규정을 위반해 관련 문서를 모두 파기했다는 게 국민의당 주장이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측이 안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안민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을 고발했다.

이밖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자신이 안 후보의 지지 발언을 했다는 문 후보의 TV토론 언급을 문에 삼아 고발장을 내며 고소·고발 전쟁에 동참했다.

검찰은 일단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신중한 모드를 유지하면서도 발 빠른 경우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다.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 측 고발장이 접수된 지 사흘 만인 지난 달 27일 고발인인 민주당 측 대리인을 불러 고발 취지·배경 등을 조사했다. 하 의원은 같은 날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로선 대선 이전에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

차권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 전 난무한 고소·고발전이 결국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후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정치권을 들쭉날쭉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늦어도 11월 9일 이전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종형기자golee@연합뉴스



1일 서울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연합뉴스

오늘밤 8시 대선후보 마지막 TV 토론회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마지막 TV 토론회가 2일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삼삼동 MBC에서 열린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세 번째 TV 토론회이자 SBS·한국기자협회, KBS,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가 주관했던 토론까지 합하면 6번째 TV토론이다.

이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는 앞선 정치, 경제 분야 토론에 이어 사회 분야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구상 발표와 후보들 간 검증이 이뤄진다.

TV토론은 주요 공중파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TV토론회는 5·9 ‘장미 대선’을 7일 앞두고 열리고, 또 마지막 TV 토론이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5명의 주요 정당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박근혜 오늘 첫 재판 절차 개시 ... 법정 나올까

출석 의무 없어 불출석 관측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준비절차가 예정된 2일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출석할지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19대 대통령선거가 오는 9일로 예정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대선일 이전에 법정에서 출석할 경우 ‘표심’에 영향을 줄지도 또 다른 관심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최순실(61)씨,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일 오전에 연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일단 불출석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던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도 예상대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무죄 판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거나 전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말 그대로 정식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다.

기소된 혐의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해 증거 조사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대 관심사는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통상 피고인 측 변호인이 나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개진한다. 이런 절차차이로 인해 외부 노출을 극구 꺼리는 박 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연합뉴스

프랑스 낭트시립예술대학 한국분교 순천 유치 확정

아티스트·디자이너 양성

순천시시는 프랑스 낭트시립예술대학 한국분교 설립이 ‘아시아생태문화중심’ 순천시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낭트시립예술대학은 현지 실사와 최종 협의 등을 거쳐 지난 달 26일 피에르 장 갈렐 총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낭트시립예술대학 한국분교 순천설립을 확정 통보했다.

낭트시립예술대학은 아티스트 또는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실기 전문 교육 기관으로 1904년 개교했으며, 프랑스 50여 개 예술대학 중 5위 이내의 유명 대학이다.

현 피에르 장 갈렐 예술대학 총장은 미국 텍사스, 아프리카 세네갈 등 대륙별 분교 추진을 통해 낭트시립예술대학의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순천 분교는 내년 3월부터 순천민국

가정원 프랑스정원 내 건물에서 최소 6년 동안 운영된다. 매 학기 낭트시립예술대학 분교의 교수진과 석사과정 학생 10여 명이 6개월 과정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느끼고 창작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방학 기간에는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권의 분교 입학대상 학생들의 현지 적응을 위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순천시시는 낭트예술대학과 최종 협약(안)을 작성해 5월 중 임시회 기간에 순천시회의의 동의를 받아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조중훈 순천시장은 “낭트예술대학 학생과 교수 등의 작품을 순천만국가정원이나 문화의거리에 전시해 품격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아시아생태문화중심 순천 실현에 한 걸음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광주 서구민의 날 기념식 1일 광주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3회 서구민의날 기념식에서 임우진 서구청장 등 참석자들이 축하 떡 케익을 자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 감염병 환자 최근 5년새 7배 급증

비브리오패혈증 등 ... 9월까지 비상 방역체계 구축

전남도내 감염병 환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1군 전염병인 A형 간염, 2군 전염병인 유행성기하선염과 수두, 3군 전염병인 쯤쯤가무시증과 신증후군출혈열은 지난 5년간 환자수가 최대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집단환자 발생에 대비해 연중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하고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상 방역근무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현상, 해외여행객 증가, 외식기회 증가 등 식생활 패턴의 변화 등으로 감염병이 연중 발생하고, 여름철 집단환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신속한 대응 조치를 위해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한다.

9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방역 대책반을 구성해 ‘감염병 예방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상시대응 방역체제로 총력을 기울일 계

획이다.

이 기간동안 병원·의원·학교 보건교사·이장 등 2898명으로 구성된 질병 정보 모니터링 운영, 해안지역 집중 비브리오패혈증, 콜레라 해·하수검사, 취약지역 방역소독 등 각종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및 집단 환자 발생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환자 발생 시 도 및 22개 시·군에 구성된 감염병 역학조사반이 출동해 감염원인 등을 조사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하게 된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전

남도내 전염병 환자 수는 2만2542명으로, 장티푸스 등 1군 전염병에 470명, 수두 등 2군 전염병에 1만3423명, 말라리아 등 3군 전염병에 8649명이 감염돼 치료를 받았다.

특히 A형간염은 지난 2012년 299명에 불과했던 환자 수가 2016년 2423명으로, 554명이었던 수두 환자 수는 2443명으로, 634명이었던 쯤쯤가무시증은 1763명으로 각각 급증했다.

말라리아 환자도 2012년 4명에서 지난해 9명, 1명이 불과했던 렙토스피라증은 25명대로 늘었다. 2012년 1611명이었던 감염병 환자 수는 지난 2013년 3598명, 2014년 5224명, 2015년 6100명, 2016년 6009명 등의 추세를 보였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이게 나라냐’ 국민 88%가 염원하는 국가대개혁을 위한 3대 개혁입법 추진할 ‘통합정부’ 구성안 사전 발표하여 유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합니다!

“우연히도 올해는 1894년 7월 27일 시작된 갑오개혁(甲午改革) 120주년이 되는 해다. 당시 개혁의 실패는 식민지 전락과 민족 분단을 가져왔다. 지금 우리는 신진국 문턱을 넘어설 것인가, 아니면 주저앉을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그 원인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 달러 돌파 이후 이에 걸맞은 제도 개혁이나 행정 혁신이 없어 한국 사회는 몸집은 커졌는데 옷은 과거 그대로 입고 있는 셈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인구 고령화와 복지 수요의 증대는 갈수록 빨라지고 사회적 불평등은 줄어들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셈이다. 5000년 역사 속의 뿌리 깊은 직제를 일소하고 환부를 드러내는 국가대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선진국 진입을 위한 마지막 기회와 생각을 구성부와 시장, 시민사회가 증지를 모아야 할 때다.”

이상은 3년 전 동아일보사가 2015년 4월 세월호 참사 1년째, 갑오개혁(甲午改革) 12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으로, 전문가 100명과 일반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또다시 나라를 잃을 수도 있다는 역사적 현실진단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과제로 국가대개혁을, 국가대개혁의 지향점으로 제도개혁과 행정혁신을 지목한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는 시의 적절한 것으로, 3년이 지난 오늘 ‘이게 나라냐’는 촛불민심과도 부합됩니다. 그 후 시민사회는, 1600만 촛불민심은 박근혜가 이끌었던 ‘이게 나라냐’는 국가대개혁을 위한 3대 개혁입법 추진할 ‘통합정부’ 구성안 사전 발표하여 유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 1. 나라를 잃었던 120여 년 전 갑오개혁(甲午改革)의 전야와 다음없는 난국에서 이대로 대선을 치른다면 우리 국민은 또 다른 '5년 내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 정치권은 국가개혁을, 국가개조를 외치오다가 이는 뒷이되고, 이제 유력 대선주자들은 ‘적폐는쟁, 폐권논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5년 내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든 '적폐세력', '폐권세력'으로 매도당할 패자나 '적폐세력', '폐권세력'에 정권을 빼앗긴 패자가 심리적 승복할 리 없습니다.
- 2. 대선주자들은, 시대적과제인 '국가대개혁'은 외면한 채 국가 채무가 사상 최고인 1433조원을 넘었는데도 눈앞의 표민 의식해 '현금 퍼주기' 식 호재행위만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현혹시킨, 이명박정부의 '747 공약(7% 경제성장률, 4만 달러의 국민소득, 세계 7대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장밋빛 청사진)', 박근혜정부의 '474 공약(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장밋빛 청사진)이 空호로 끝난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고, 더욱이 국가 채무가 사상최고인 1433조원을 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 대선 주자들은 거리와 시장에서, 노인복지·아동수당·청년수당 등으로 눈앞의 표민 얻기에 급급해 '현금 퍼주기' 식 호재행위만 일삼고 있습니다.
- 3. 국민 88%가 염원하는 국가대개혁을 위한 3대 개혁입법 추진할 정책연합 '통합내각' 구성안 사전 발표하여 유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지난 3년 동안 정치권은 국가개혁 국가개조를 하겠다면서 아무런 대책도 한일도 없이, 촛불민심에 무임승차하여 승자독식의 패거리정치 대권경쟁을 위한 갖가지 호재행위만 일삼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통합정부'나 '공동정부' 등을 외치고 있는데, 이 또한 국민의 안심과 나라의 안위를 저버린 또 다른 호재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엘리트에 의한 대의정치의 한계인 것입니다.

엘리트에 의한 대의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600만 촛불은, 깨어있는 5000만 국민은, 국가대개혁을 위한 3대 개혁입법 추진을 대선주자들과 국민에 직접 명명해야 합니다. 국가대개혁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용인되었던 지도자의 독재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하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인 법과 제도를 정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인 법과 제도 정비 중 지극히 기본적인 것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3대 개혁입법을 우선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다양한 가치와 시각이 공존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치개혁입법으로 '권력분장정부비례대표제' 도입을, 둘째 공정하고 역동적인 시장경제 시스템구축을 위한 경제사회 개혁입법으로 영미식 '징벌적순혜배상제' 도입을, 셋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나오된 국민의 존엄과 가치 구제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소송제'를 우선 도입하라는 것입니다.

河東鄭氏 宗員(하동정씨 종원) 33인 | 민주인권평화100만국민연대 SNS 그룹

관리인 대표 정운채 010-3616-1187/springmomy@daum.net